

# 노동계 1만1200원 vs 경영계 9870원... '1330원' 공방 시작

## 최저임금 첫 수정안

노동계 1만2600원서 1400원 낮춰  
“단신 노동자 생계비 월 245만원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높여야”

경영계 최초 ‘동결’서 10원 올려  
“영세 중소기업 지불능력 고려해야”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서 서로 다른곳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양측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지난 9일 열린 9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선 노사 양측이 시급 기준 최초 제시안을 내놓은 뒤 1차 수정안이 나왔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3.6%(1340원) 인상한 1만1200원을, 경영계는 0.1%(10원) 인상한 9870원을 제시해 1330원 차이로 좁혀진 상태다.

다만,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팽팽해 노사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다.

노동계는 급격히 오르는 물가에 근로자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로자위원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9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공한 심의자료만 보더라도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는 월 245만원이 넘게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위원측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17번의 동결안과 3번의 삭감안을 제시했다”며 “현실적인 인상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지만, 최저임금은 5% 인상에 그쳤다. 2023년엔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며 “모든 지

표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인상을 주장했다.

경영계는 올해도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내놓았다가 위원장의 요구에 0.1% 인상한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경영계는 그간 최저임금 인상이 컸고,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황은 중위임금의 60%라고 하는데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5.8%로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섰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우리 사회에서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취약계층인 은퇴 고령자, 미숙련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노동시장 외 부자도 고려해야 한다”며 “취약층 구직

자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특히 올해 최임위 최대 쟁점이었던 최저임금 구분 적용 무산에 반발해 한계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 전무는 “구분적용이 부결됨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동일하게 지켜야 하는 단일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며 “이런 만큼 현 수준에서 이 조차 감당 못하는 한계업종을 기준으로 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임위는 11일 오후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추가적인 수정안을 제시해 간격을 좁히게 된다. 다만, 최종 노사 합의가 불발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표결로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게 된다. 지난해 최임위에서는 노사 합의 실패로 표결을 진행한 결과 경영계 제시안으로 결정된 바 있다.

최저임금 법정 고시일(8월5일)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주 중 최저임금이 결정될 전망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29세 이하 청년취업자 20개월째 뒷걸음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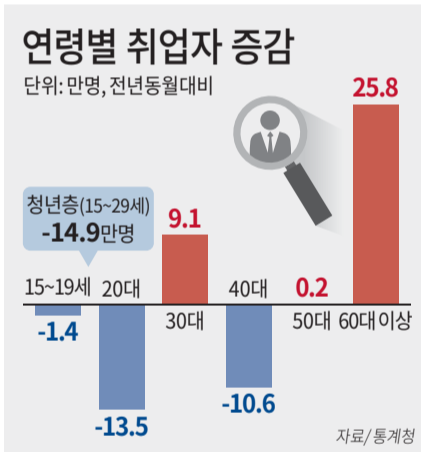
### 통계청, 6월 고용동향

취업자 증가폭 두달째 10만명 밑돌아  
60세 이상, 30·50대 취업자수 증가  
20대 13.5만명, 40대 10.6만명 감소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두 달째 10만 명을 밑돌았다.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9만6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또 29세 이하 청년취업자는 20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 갔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6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1월(+38만명), 2월(+32만9000명), 3월(+17만3000명), 4월(+26만1000명) 등과 비교해 증가폭이 크게 둔화했다. 5월(8만명)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10만 선을 하회한 것이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25만8000명 늘어났다.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9만1000명, 2만명 늘었다. 반면, 20대 및 40대 취업자는 각각 13만5000명, 10만6000명 감소했다. 청년층을 가리키는 15~2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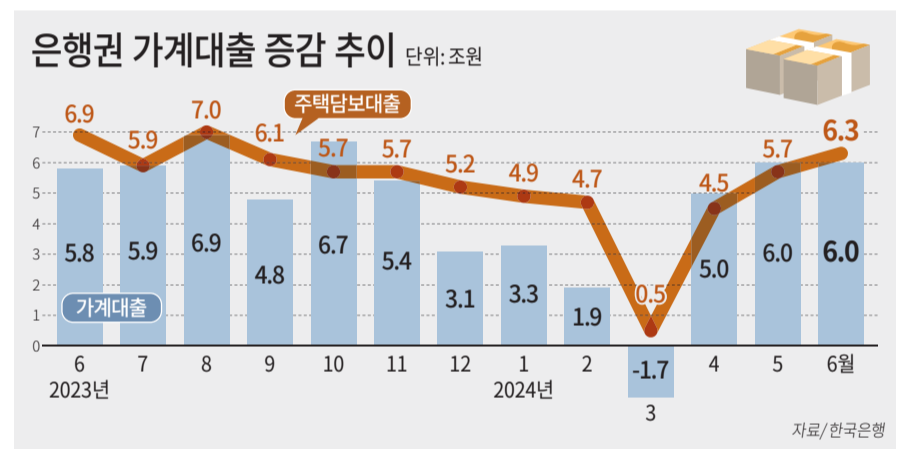
취업자 역시 1년 전보다 14만9000명 줄어 들며 20개월째 뒷걸음질했다.

업종별로,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 대비 9000명(0.2%) 증가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7개월째 증가 추세를 보였다. 금융 및 보험업이 2만명(2.5%) 늘었고 농림어업은 3만3000명(-2.0%) 줄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2만명, 4.2%)과 정보통신업(7만5000명, 7.2%) 등에서 증가했지만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6만2000명, -4.3%), 교육서

비스업(-6만3000명, -3.2%), 도매 및 소매업(-5만1000명, -1.6%) 등에서는 감소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85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5만명(6.2%) 늘며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돌봄 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됐지만,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도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578만6000명으로 2만1000명(0.1%)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는 40대(3만2000명, 13.7%)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20대(3만8000명, 10.6%)와 50대(3만명, 8.8%) 등도 증가했으나 60세 이상(-1000명, -0.1%)에서는 감소했다. 서 국장은 “비경제활동인구는 40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며 “통상적으로 60세 이상에서 증가해왔는데 최근 50대가 플러스 전환됐고 지난달은 50대 여성 쪽에서 비경제인구 전환이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다시 ‘영끌’ 바람?... 주담대 6.3조 증가

한은, 상반기 누적 주담대 26.5조 ↑  
주택거래 늘고 대출금리 하락 영향  
신용대출 포함 기타대출 3000억 ↓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이 6조원 증가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3000억원 감소한 반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6조3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 주담대는 26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021년 상반기 30조4000억원 증가 이후 3년 만에 최대폭이다. 최근 수도권 중심의 주택매매거래가 늘고 있어 시차를 두고 주담대 증가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 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보다 6조원 증가한 111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5월(6조원) 이후 두번째다.

가계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전세자금을 포함한 주담대(876조9000억원)는 6조3000억원 늘었다.

원지환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거래가 늘고 대출금리가 하락하며 주담대 증가폭이 확대됐다”며 “정책대출 공급도 증가하면서 대출 증가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월 1만2000호에서 3월 1만7000호, 5월 1만8000호 거래됐다. 주담대는 주택거래 이후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4~5월 매매거래가 주담대 증가폭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신용대출은 포함한 기타대출은 전달보다 3000억원 감소한 23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 ◆주담대, 은행 늘고 2금융권 줄고

한은은 예금은행의 주담대는 증가하고 있지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담대가 감소해 가계대출 증가폭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가계대출은 한달전과 비교해 4조4000억원 증가했다. 전달 증가폭(5조3000억원)보다 줄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 금융권 주담대는 한달전과 비교해 6조1000억원 증가했다. 2금융권을 중심으로 주담대는 2000억원 감소했지만 은행권을 중심으로 6조3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거래 회복세에 따라 은행을 중심으로 주담대 증가폭이 확대됐다”며 “주도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내유리 기자 yul115@

## 소공연 “청탁금지법 한도상향 적극 지지”

국민의힘, 식사비 3만원→5만원  
농축수산물 15만원→30만원 제안

소상공인들은 국민의힘이 정부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을 제안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10일 논평을 통해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주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규제하는 식사비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소공연은 “경기침체와 물가인상에 따른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청탁금지법 규정이 물가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한도 상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고통을 설명했다. 현재 최저임금 심의는 진행 중이며 지난 9일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1200원을, 경영계는 9870원을 제시했다.

소공연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603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으로 63.5%가 인상됐다”며 “몇 년 사이 원재료비 상승, 공공요금 급등 등 수많은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법 규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소비는 위축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